

한-EU FTA 전망

2006년 11월 17일

김지성

한국과 EU 무역 관계 개요

- 이 절의 내용은 EU 집행위의 External Trade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자 무역 관계’ 페이지 중 한국 페이지(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korea/index_en.htm)와 같은 조직의 2006년 발표 한국과의 무역 통계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448.pdf)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2005년 한국과 EU 사이의 무역량은 한국이 수출 330억 유로, EU25 수출 201억 유로로 한국이 약 131억 유로의 흑자를 봄.
- 2005년 한국은 EU에게 여덟번째 큰 무역 상대국이며 EU는 한국에게 세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임. 또한 수출로만 보면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수출 대상국임(미국과 비슷한 정도).

	한국	EU	무역수지
농산물	101	1045	-944
에너지	354	30	324
기계	18507	6469	12038
운송장비	8544	2204	6340
화학	1100	3157	-2057
섬유·의류	990	567	423

표 1: 2005년 EU25 상품 교역 (단위는 백만 유로)

- 서비스 부문 교역에서는 2004년 한국이 33억불 수출에 EU는 56억불 수출로 23억불의 무역 적자가 발생함. 서비스 부문에서 적자는 2003년에도 발생함.
- 2003년 EU는 30억 유로를 투자하여 한국 내 외국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 투자가임. 1962년이래도 누적총계로도 가장 큰 투자가임. 2004년에는 한국의 EU 투자는 늘었지만 EU의 한국 투자는 줄었음.
- 1990년 후반부터 EU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구조적인 적자를 보임.
- EU는 이러한 무역 적자의 배경에 한국 상품과 서비스 시장 접근에 장벽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무역 장벽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구 사항의 준비와 신청

에 관련하여 존재하며,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있다고 보고 있음.

- 양자간에 이미 맺어진 무역 관계 협정 들은 1) the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2001)과 2) Agreement on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1997)이 있음.
- 양자간에 현재 4개의 사안이 WTO의 분재절차가 진행중임. EU가 한국에 대해 한국의 조선업에서 보조금에 대해 제소를 하였고 한국은 DRAM, 조선업에서 임시 방어 기제 그리고 조선업 보조금에 대한 EU의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에 관해서 제건을 제소하였음.
- WTO DDA 협상에서 공업품, 반덤핑 규제 그리고 서비스에서 시장 확대 조치에 양자 모두 공격적임. 초기에는 한국은 EU와 함께 네 개의 싱가포르 이슈 모두의 협상을 시작할 것을 지지하였으나 무역 추진에 관한 협상을 먼저 하고 다른 이슈는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입장을 바꿈. 한국은 DDA 협상에서 쌀과 같은 농업의 민감 품목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며 방어로 나옴. 이에 대해 EU는 민감 품목들에 대한 우려에 공감함. 어업과 삼림업에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EU는 요구하지 않음.

EU의 통상 전략

- 이 절의 내용은 2006년 4월에 EU 집행위의 External Trade에서 발표한 "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 The Communication"을 발췌 요약한 것임. 원문의 주소는 <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30376.htm>임.
- 성장과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EU의 리스본 전략의 하부 개념으로서 통상전략이 위치 지워짐. 리스본전략은 2005년 갱신됨.
- 통상정책에서 다자간 협상(WTO)를 중시하고 있으며, 집행위 차원에서 DDA 협상의 재개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유럽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 개발과 선린(development and neighbourhood)’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격을 이룸.
- 지구화하는 경제에서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국내 정책이 통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
- EU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제조업 분야의 GDP 비중이 지구화 과정에서도 유지되고 있음. 서비스 부문에서도 경쟁력이 있음. 고급품(upmarket products)가 세계 수요의 삼분의 일과 유럽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고부가 상품에서 EU는 일본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상위 기술 분야에서는 지위가 떨어지고 있음. 고부가 농산물을 포함하는 상품의 연구 개발 이 필요하며 서비스가 EU가 이러한 영역의 제품을 파는데 중요함. 수요가 일정한 국가에서는 유럽의 수출이 견조하나 급격히 성장하는 시장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에 뒤처짐.
- 개방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의 압박이 커지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 사회적·환경적 기준과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의 가치를 지켜야함을 강조.

- 해외 시장의 개방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추구함. 하나는 “**주요한 신흥 경제와 지역과의 더욱 강한 접촉(engagement)과 무역 장벽에 대한 날카로운 집중**”임.
-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신흥 경제의 중요성이 높은 면서도 이들 시장의 무역 장벽이 높은 것에 우려. 무역 장벽에 있어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규제 사항과 같은), 천연 자원(특히 에너지에 대한 접근, 그리고 새로운 성장 분야(지적재산, 투자, 공적조달 그리고 경쟁과 같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짐.
- 2005년 말 섬유 무역의 자유화의 혜택이 일관되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집행위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수입과 소비자 가격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마련하기로 함.
- 무역 자유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지구화조정기금(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를 도입.
- 무역의 확장과 관리에 있어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봄. 다자주의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FTA는 개방성과 통합의 촉진에 있어서 더욱 깊고 빠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다자간 협상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FTA가 잘못 될 경우, 무역을 복잡하게 만들고, 비차별의 원칙을 훼손하며 그리고 취약한 경제를 배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FTA는 그 범위에서 포괄적이며, 실제로 모든 무역에서 자유화를 이끌어내고 WTO의 규율 이상을 성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아프리카 캐러비언 및 태평양 국가와의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과 중남미 및 앤디안 공동체와의 미래 연합 협정(future association agreement)에 이미 FTA가 일부로서 반영되고 있으나 아시아와는 이러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그 내용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음.
- 새로운 FTA 상대국의 기준은 하나는 시장 잠재력(경제의 규모와 성장)과 EU 수출 이익 반환 보호의 수준(관세와 비관세 장벽)임.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잠재적 상대국의 EU 경쟁국과의 협상과 주변국과 개발도상국 파트너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을 잠식하는지임.
- 위와 같은 기준에서 ASEAN, 한국 그리고 Mercosur(현재 협상 진행중)이 최우선으로 제시됨. 그리고 인도, 러시아 그리고 Gulf Co-operation Council이 다음으로 잡힘. 중국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은 되나 기회와 함께 제기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 새롭게 추구하게 되는 **경쟁 추동형(competitiveness-driven) FTA**는 내용면에서 포괄 범위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야심적이어야 한다고 봄. 서비스와 투자에 있어서 광범위한 자유화를 포함하는 무역 자유화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을 추구할 것임. 수출에서 있어서 모든 형태의 관세, 세금, 비용 그리고 규제, 그리고 양적인 수입 제한 조치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규제(regulatory)의 융합(convergence)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다루고 강력한 무역 촉진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봄. 비관세장벽에서 특히 강력한 지적재산과 경쟁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경우 EC Enforcement Directive(집행 지침)에 준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 금융, 조세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도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통제(good governance)에 관한 조항도 추구할 것임.
-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에 있어서 단순하고, 현대적이며 그리고 지구화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할 것임.

- 새로운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 노동 기준과 환경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상대국의 개발 필요를 고려하며 그리고 다른 개발 도상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것임. 또한 상대국이 저개발국가에게는 무관세 또는 무쿼타 시장 접근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시장 접근을 촉진하도록 촉구할 것임.
- FTA 협상의 시작은 사례별로 결정될 것임. 이 때 시장 상황과 상대국의 준비 상태 그리고 광범위한 정치적 고려 사항들에 따라 판단할 것임. 원활한 협상을 위해 미래 상대국이 EU와 유사한 전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대서양 양안 무역(transatlantic trade)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비전통적 장벽이 심각함. 2005년에 시작된 Transatlantic Economic Initiative와 최근의 각종 규제 관련 대화가 진척이 적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함. EU와 미국 사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또는 영업 비밀과 같은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협력이 중요함.
- 중국은 유럽이 지구화를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기회로 만드는데 가장 거대한 시험임. 조만간 집행위는 중국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전략을 제출할 것임.
- 지적재산권 강제에 있어서 미래 양자 협정과 기존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조항을 강화를 추구할 것임.
- 2007년 초에 집행위는 기존 ‘시장 접근 전략(Market Access Strategy)’(1996년 시작된)을 개정하여 제출할 것임.
- 공공 조달 부문에서 EU 시장의 개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국들의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임.
- 무역 방어 장치(trade defence instruments) 측면에서는 불공정 가격, 무역 관행 또는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방어 장치가 필요함. 해외 outsourcing 등과 같은 지구화 경제에서 맞는 장치가 필요함.

기타

- External Trade는 2006년 4월 26일 “Terms of reference Korean qualitative study”(http://trade.ec.europa.eu/doclib/html/128461.htm)를 발표하여 EU와 한국의 FTA의 영향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관한 위탁 과제를 발표함. 연구는 정성적 평성적이고 업종별 (sectoral) 평가를 제시해야 함. 위탁 사항(terms of reference)에 따르면 EU와 한국의 FTA는 소위 ‘깊은 협정(deep agreements)’(포괄적 FTA)을 지향하게 됨.
- 이 연구는 1) EU와 한국의 무역과 생산의 구조 분석: FTA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 서비스 그리고 규제 분야의 영향, 2) 한국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경제 성장 전망, 3) 한국의 비관세, 서비스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무역 정책: 중요한 무역 장벽과 FTA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가지는 합의, 그리고 4) 한국의 행정 시스템 내에서 잠재적 입법과 구현 이슈의 측면에서 한국과 EU의 FTA를 통한 깊은 통합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임.
- 이 위탁 연구는 5월말까지가 접수가 가능하고 계약에 서명하고 4개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같은 위탁 사항에 따르면 이 연구와 별도로 general CGE에 기반한 정량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임. 이 정량적 연구는 상품에서 관세 자유화와 서비스 자유화에 초점이 놓이게 됨.